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9.24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야심차고 현실적인”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 마련 계획(9.18)
- ② 드라기 총재, “EU 연구자금은 ‘대규모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해야”(9.18)
- ③ ERC 의장, EU 연구자금 단일 규칙집 도입 시 “경직성으로 인한 프로그램 붕괴 위험” 경고(9.18)
- ④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 새로운 EU 연구·기술 인프라 계획을 위해 추가적 자금 지원 강조(9.18)
- ⑤ 유럽 기업 지도자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 … 전략적 우선과제의 신속한 이행 촉구(9.16)
- ⑥ EU, 인도의 번영·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9.17)
- ⑦ EU 집행위, ‘쿠키 배너’ 축소 추진 … 디지털 규제 간소화 일환(9.16)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유럽대학협회(EUA), 유럽 내 위험에 처한 연구자 지원 기회 확대에 관한 권고안 발간(9.17)
- ② 집행위, ‘EU funding & me’ 모바일 앱 출시(9.16)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inGOV 프로젝트, 공동 창출을 통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 ② (성공사례) CoNAN 프로젝트, 차세대 마이크로칩 기반 유전자 분석 도구 개발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야심차고 현실적인”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 마련 계획(9.18)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을 통해 EU의 분산된 연구 시스템과 이동성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조
 - 9월 17일 연구혁신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서 자하리에바는 동 법안은 기본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 이는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국가 규칙과 시스템이 유럽 내에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
 - ERA는 2000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으나 대부분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 진행되어 연구·혁신을 위한 단일 시장을 만드는 데 실패. 이에 따라 ERA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제정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당초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자하리에바는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기(2024~2029) 내 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
 - 자하리에바에 따르면, 법안은 연구자의 경쟁·개발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연구자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다루며, 산업과 공공기관이 R&D에 GDP의 3%를 투자하는 오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목표로 함
 - 집행위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증거 제출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ERA 법안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ERA의 첫 번째 주요 요소로, 집행위는 2023년 2.22%에 그쳤던 R&D 투자를 GDP의 3%로 증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

- Science Europe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조한 성과를 내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EU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이 협회는 EU의 경제 및 재정적 틀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유럽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연구자 협의회(European Council of Doctoral Candidates and Junior Researchers)는 각국 정부가 예산 계획에서 벗어나 R&D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면제 조항(Escape Clause)을 제안
 - 한편,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는 EU가 산업 주도의 연구·혁신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보고서는 핀란드 R&D 자금법을 예로 들며, 핀란드는 공공 자금 1유로당 민간 자금 2유로를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
 - 코임브라 대학 네트워크와 포르투갈 연구기술기관그룹 INSEC 연구소는 3%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더 나아가 GDP의 4%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
 - 행사 패널토론에서 LERU 사무총장은 집행위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을 제안*할 것을 강조하며 각국이 자국의 연구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도록 EU가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
- * Regulation(규칙, 규정) > Directive(지침) > Decision(결정) > Recommendation(권고) > Opinion(의견) 이하 EU 입법 수단의 종류와 순서(강제력 순)이며, 규정 적용시,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며 회원국은 따로 법 제정 필요 없음
- ERA 법안의 두 번째 주요 요소는 국가 간 자금 조정 방식으로, 법안은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혁신 생태계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지원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추는 데 초점
 -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 상공회의소의 제출 의견에 따르면, EU와 국가 자금 프로그램 간의 전략적 정렬 부족, 특히 공동 자금 지원 측면에서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기업들이 EU 프로그램에 예측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전 네덜란드 과학부 장관은 ERA 법안이 학문적 자유와 포용성을 중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압박을 받는 연구 주제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
 - 투자 증대와 관련해서는 EU에서 지원하는 [Policy Answers](#) 프로젝트의 피드백을 통해 포용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집행위의 세 번째 목표는 연구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지식과 인재의 유럽 전역의 '순환'을 촉진해 "다섯 번째 자유"를 구현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강조
- 코펜하겐 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가 활용되길 바라며 학계 외부에서의 활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가치 창출 (Valorisation) 활동은 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헬프데스크 코디네이터 프리츠는 '가치 창출'과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이 EU 내에서 고르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ERA 법안은 박사 과정 교육과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역량을 통합 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용 지표와 성비 균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
 -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균일한 비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제3국 연구자들이 EU로 이동하는 절차를 가속화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추진
 -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 유럽이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의 정치적 의제 변화에 관계없이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area/zaharieva-plans-ambitious-realistic-era-act>

② 드라기 총재, “EU 연구자금은 ‘대규모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9.18]

- 드라기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 1,750억 유로는 환영할 만하나,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
 - 드라기는 9월 16일, 자신의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서 회원국과 브뤼셀이 신속한 개혁과 첨단 기술 투자 확대에 합의하지 않으면 유럽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
 - 동 보고서는 EU 예산 구조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EU 집행위가 경제 경쟁력을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드라기는 집행위의 조치가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으로 드라기가 경고했던 위기 전망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언급
 - EU 집행위는 7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거의 두 배로 증액한 1,750억 유로로 제안하며, 2028~2034년 장기예산 하의 4,090억 유로 규모 ‘유럽 경쟁력 기금(ECF)’에 포함시킨 바 있음
 - 그러나 드라기는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미·중과의 혁신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추가 자원이 “대규모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 드라기는 회원국과 집행위가 스타트업을 위한 ‘28번째 체제’를 조속히 합의·이행할 것을 촉구(EU 전역에서 통합 법인 설립 방식을 도입해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혁신 기업이 27개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운영·거래·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집행위가 이미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회원국의 불확실한 지지가 도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첫 단계는 기업용 디지털 ID 도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 한편 9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또 다른 회의에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1,750억 유로 예산이 2년간의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차기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EU 경쟁력에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럽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
- 또한 유럽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미국·중국 대비 크게 낮다고 지적하며, 민간 부문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
- 집행위는 회원국 재정 검토 도구를 활용해 세금 감면 등으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권고할 예정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budget/eu-research-funding-should-focus-sizeable-priority-programmes-draghi-says>

③ ERC 의장, EU 연구자금 단일 규칙집 도입 시 “경직성으로 인한 프로그램 붕괴 위험” 경고(9.18)

- 유럽연구위원회(ERC) 랩틴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연구 자금 행정 절차의 단일화 계획이 ERC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집행위는 7월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2028년 개시 예정) 구상에서 여러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규칙집 도입을 제안
 - 랩틴 의장은 9월 18일 함부르크 과학정상회의에서 “이는 모든 프로그램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각 연구기구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등 절차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연구 목표 수행, 중소기업 지원, 연구 컨소시엄 및 개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므로, 각 영역에 맞는 맞춤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 ERC의 성공 요인은 독립적인 과학위원회가 직접 선발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제안서를 평가한 것. 반면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분야는 자원하는 전문가에 의한 심사 방식을 채택, 이는 민주적이지만 ERC 연구비 수혜 가능성이 낮음
 - 단일 규칙집이 도입될 경우, ERC가 외부 전문가를 유용하게 채용하거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존에 활용하던 맞춤형 방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
 - 랩틴 의장은 ERC가 전략 설정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보호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P10에서 ERC의 예산 비중이 호라이즌 유럽 대비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호라이즌 유럽 전체 예산의 17%를 ERC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히 문헌 인용의 상당 부분이 ERC 지원 성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ERC 기여도를 강조
 - 아울러 EU 경쟁력 기금이 FP10과 밀접히 연계될 경우,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위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대학계의 우려를 언급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council/single-rulebook-eu-research-funding-risks-death-inflexibility-warns>

4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 새로운 EU 연구·기술 인프라 계획을 위해 추가적 자금 지원 강조(9.18)

※ EARTO(Europ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sations)는 유럽 내 약 350여 개 이상의 연구 및 기술 혁신 조직들(공공 연구기관, 기술 기반 연구 센터, 연구소 및 혁신 센터 등)로 구성

○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기술 인프라 전략에 대해 유럽 연구기술조직협회(EARTO)의 아타네 사무총장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

- 동 전략에서 언급된 ‘연구 인프라’는 연구자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단일, 분산 혹은 가상 형태)이며, ‘기술 인프라’는 시제품 테스트와 상용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R&D 시설

- 동 전략은 집행위의 FP10에서 신규 및 기존 연구 인프라에 대한 20% 공동 자금 조달 방안 제안의 후속 조치로 유럽 대학협회는 전략이 더욱 일관된 유럽 프레임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 아타네 사무총장은 집행위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인프라 전략에 대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전략의 성공여부는 차기 다년간 예산과 각 회원국의 투자 확보에 달려있다”고 언급

○ 집행위는 연구 및 기술 인프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

- ①접근 헌장(Charter of Access)과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통한 사용자 접근 조건 조율, ②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 및 가장 접근 확장 장려, ③국가 간 및 초국가적 접근 방안을 설정할 예정

- 또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특히 작은 기업들을 위해 관리 및 기업가 교육 기회를 강화하려 노력

- 데이터 관리 및 오픈 사이언스 표준화를 장려하며, EU 역외와의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ERA) 통합을 지원 계획

-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자본 지원에 각 16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자본 지원’과 관련하여 스페인 Tecnalia의 책임자이자 EARTO 회장인 발레로는 기술 인프라는 자본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유럽투자은행(EIB)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EU는 기술 인프라만을 위해 130억~16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유럽연구인프라전략포럼(ESFRI) 페냐 의장은 ‘연구 인프라’는 2030년까지 적어도 16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할 것이며, 더 긴 시간 범위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 설계부터 업그레이드와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연구 커뮤니티는 연구와 기술 인프라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두 가지 인프라가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것을 우려. 이에 집행위 관계자는 전략 마련에 이를 고려하였음을 확인
 -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통합이 사회로의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다음 세대의 과학자와 기업가를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있었다고 소개하였으나, “연구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가 경쟁하게 되면 정책과 자금 지원이 더 분열될 수 있다”며 경고
 - 이에 집행위 관계자는 ‘연구·기술 인프라’가 자금을 두고 경쟁하지 않도록 전략을 준비한 점을 확인. 동 관계자는 “연구·기술 인프라의 생태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두 가지 인프라의 별도 요구 사항과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
 - 이는 집행위가 ‘연구·기술 인프라’를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새로운 필라로 이동시키되, 별도의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infrastructures/new-eu-infrastructure-plan-needs-more-work-funding-research-groups>

5 유럽 기업 지도자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 ... 전략적 우선과제의 신속한 이행 촉구(9.16)

- 유럽산업인원탁회의(ERT)* 소속 산업·기술계 지도자 대표단은 9월 15일 저녁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나 드라기 보고서 발표 1주년 및 최근 연례 시정 연설(State of the European Union)을 배경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

* 유럽 본사 다국적 기업의 CEO와 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로, 산업·기술 전반을 대표. 이번 회동은 EU 경쟁력 전략을 뒷받침할 산업계의 핵심 과제를 부각하는 자리였음

- (단일시장) ERT는 단일시장이 번영과 회복력의 핵심 원천임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의 로드맵 제시 약속을 환영. 자본·에너지·통신·28번째 체제 등 분야의 통합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장벽의 신속한 철폐를 촉구
- (규제 단순화) 행정 부담, 준수 비용,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투자 유치 촉진. ERT는 옴니버스(Omnibus) 작업을 환영하며 보고 의무 25% 감축을 넘어서는 확실한 의지 표명을 요구
- (경쟁정책) 글로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정책 및 기업결합 가이드 라인을 개혁하는 데 있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긴급성을 강조
- (교역) 7월 EU-미국 합의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며, EU 교역의 83%를 차지하는 미국 외 개방 시장들과의 교역 흐름과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ERT는 EU-메르코수르, EU-멕시코 FTA 등을 지지하고 인도와의 협상 진전을 기대
- (혁신)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의 연구·개발·혁신(R&D&I) 지원, 28번째 체제 도입, Scaleup Europe Fund 발표를 환영. 유럽의 기술 리더십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며, 산업·과학 생태계 전반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강조
- (디지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ERT는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 단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위의 디지털 옴니버스 발표를 기대

- (안보·방위) 유럽 안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방위산업 단일시장 심화가 큰 이익을 가져올 전망. SAFE, EDIP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Readiness 2030을 유럽 가치사슬·이중용도 혁신의 규모 경제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방위 관련 기술에서의 리더십이 저지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 산업생태계 구축의 열쇠임을 강조
- (에너지) 청정산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럽 제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 인허가 지연, 낙후된 전력망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 불안정한 지정학은 의존도 축소의 긴급성을 부각.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유출 방지가 탈탄소화 경로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

출처

<https://ert.eu/documents/europes-business-leaders-meet-president-von-der-leyen-urge-swift-action-to-advance-strategic-priorities/>

6 EU, 인도의 번영·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9.17)

-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인도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EU-인도 아젠다(New Strategic EU-India Agenda)’ 공동 성명을 채택
 - 동 전략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024~2029년 정치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자 협력을 심화·확대·조율하여 양측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고 글로벌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폰데어라이엔은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무역·투자·인재이동을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며 청정전환을 가속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방위산업 협력도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또한, 유럽이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임을 상기시키며,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의지를 표명
 - 금년 2월 인도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 성명은 양측의 공동 이해와 상호보완적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제시하며, 양자 협력 강화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무역) 공동 성명은 무역과 투자 확대의 잠재력이 크므로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또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경제안보를 제고하겠다고 밝힘
 - (스타트업) EU-인도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인도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를 초청하여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녹색금융 등 탈탄소화 및 청정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식량안보·보건·기후 및 재난 회복력 강화에 함께 대응할 기회를 제시
 - (안보)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도 EU-인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위기관리, 해양안보,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

-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역량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 하며,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보호협정(SIA) 협상도 개시할 예정
- 아울러 인도-태평양 협력,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우주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조도 주요 협력 영역으로 제시됨
- **(연결성)**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제3국과의 EU-인도 3자 협력도 진전시킬 예정
- 다자주의와 국제법,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인도의 역할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
- **(조율)** EU-인도 간 전 분야에서의 상호작용과 조율을 확대하고, 기술·노동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법률 게이트웨이 사무소(European Legal Gateway Office)를 시범 운영할 계획
- 학업·연구·취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적 이동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 하고, 시민사회·청년·싱크탱크 교류를 강화하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EU-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한다는 제안도 포함됨
- EU는 이번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인도와 포괄적 전략 아젠다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10월 외교이사회에서 채택해 회원국 참여를 보완할 예정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116

7 EU 집행위, ‘쿠키 배너’ 축소 추진 … 디지털 규제 간소화 일환(9.16)

- EU 집행위는 전자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개정안을 통해 웹사이트가 이용자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줄여, 쿠키 팝업(쿠키 배너) 노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쿠키는 이용자 기기·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정보로 분석뿐 아니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며, 과도한 팝업 노출로 ‘쿠키 피로(cookie fatigue)’ 현상이 문제로 지적됨
 - 집행위 문서는 “쿠키 조항 개정을 통해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줄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명시
 - EU는 수년간 전자프라이버시 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회원국 간 합의 실패로 올해 해당 제안을 철회한 바 있음
 - 집행위는 연말 발표 예정인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패키지에 AI, 사이버보안, 데이터 규제 간소화와 함께 쿠키 배너 규제도 포함 예정
 - 9월 15일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과도한 쿠키 팝업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16일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개시
 - 집행위는 이미 2023년 소비자정책국을 통해 자율적 서약(voluntary pledge) 방식의 쿠키 피로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성과가 미비했음
 - 디지털 옴니버스와 연계된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도 10월 말 발표 예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을 포괄하는 종합 구상을 담을 전망
 - 영국은 올해 자체 입법 Data Use and Access Bill을 통과시켜, 타겟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동의 요청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출처 <https://www.euractiv.com/news/commission-to-reduce-cookie-banners-in-simplification-push/>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유럽대학협회(EUA), 유럽 내 위험에 처한 연구자 지원 기회 확대에 관한 권고안 발간(9.17)

- 유럽대학협회(EUA)는 유럽 내 위험에 처한 연구자들을 지원·촉진·통합하는 이니셔티브에 관한 권고안을 발간
 - 전 세계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생명·자유·연구 경력에 위협을 받고, 연구자가 위험에 처하면 개인의 삶과 경력뿐 아니라 연구의 질과 미래 자체도 위태로워지므로, 유럽의 대응은 매우 중요함
 - 2019년부터 시행된 유럽 내 위험 연구자 지원·촉진·통합 이니셔티브 (Inspireurope+)는 기존 지원 사업을 기록·분석하고, 신규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해 옴
 - Inspireurope+ 프로젝트는 2022년 최초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과 유럽 내 위험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전을 반영하여 동 권고안을 갱신
 - 권고안은 국가 및 EU 차원의 정부·행정기관,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부속 문서에는 권고사항별 참고 자료집, Inspireurope+ 자료, 세부 설명, 모범 사례, 관련 정책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https://eua.eu/publications/reports/expanding-opportunities-in-europe-for-researchers-at-risk-2.html>

② 집행위, 'EU funding & me' 모바일 앱 출시[9.16]

- 집행위원회는 EU 자금 지원 기회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EU funding & me' 모바일 앱을 출시
 - 이 모바일 앱은 Funding & Tenders 포털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사용자가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에서 직접 기회를 찾고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직관적인 기능과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자와 수혜자 및 신규 이용자까지 200만 명 이상의 정기 이용자들의 일상적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됨
 - 새로운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EU 자금 지원 기회 빠르게 탐색
 - 최신 EU 자금 지원 뉴스 및 행사 확인
 - 검색어 저장, 특정 주제 구독, 개인 맞춤 알림 수신
 - 실시간 알림 수신
 - 캘린더 등 도구와 연동하여 공유 용이
 - 사용자 제안 및 프로젝트 실시간 확인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및 담당자 간 메시지 교환
 - 앱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

출처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support/news/30392>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inGOV 프로젝트, 공동 창출을 통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 EU 지원을 받은 inGOV 프로젝트는 분절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실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 가능성을 입증
 - 유럽 및 그 외 지역의 공공 행정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전자 공공서비스가 자신의 실제 필요와 맞지 않는다고 인식
 - inGOV는 협업에 기반한 사용자 중심 접근을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Cassano(Uni Systems 사업개발·혁신 총괄)는 공공기관이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려 할 때 명확한 지침 없이 복잡한 절차를 헤매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 지연, 비효율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행정과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고 설명
 - inGOV 컨소시엄은 IPS 통합 프레임워크(IPS Holistic Framework)를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채택·구현 가능한 디지털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 동 프레임워크는 분절된 시스템, 상호운용성 부족 등 지속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
 - 주요 혁신은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공동 창출 협약(co-creation agreements)'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취약계층 시민과 함께 서비스를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4개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IPS 프레임워크의 적용 효과를 검증
 - (몰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한 '디지털 공동가구 단위 공공서비스' 시제품 구축으로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오스트리아) 관광세 징수 현대화를 위한 지리공간 데이터 활용으로 행정 부담 감소 및 서비스 속도 개선
- (크로아티아) 비엘로바르 시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단일 접근을 제공하는 가상 비서를 도입
- (그리스) 테살리아 지역은 저소득 장애인의 대중교통 할인카드 발급·갱신 절차를 디지털화
- 이러한 시범사업은 inGOV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며, 공동 창출과 사용자 중심 설계의 가치를 보여줌
- inGOV는 EU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참조 아키텍처 등 기존 EU 자산을 활용·강화하여 분절과 비호환을 방지하고, 각국 시범사업에 EU 정책 목표와 정합성을 부여
 - 가상비서, 모바일 앱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을 효율화
 -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된 절차 촉진을 통해 행정 중복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시민과 정부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
 - 컨소시엄은 IPS 통합 프레임워크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주력할 예정이며, 정책·연구·실무 전반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성과와 교훈을 적극 공유할 계획

inGOV 프로젝트

- 기간 : 2021.01 ~ 2024.03
- 예산 : 약 3,287,000.00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UNI SYSTEMS SYSTMATA PLIROFORIKIS MONOPROSOPI ANONYMI EMPORIKI ETAIRIA (그리스)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co-creating-digital-public-services>

② [성공사례] CoNAN 프로젝트, 차세대 마이크로칩 기반 유전자 분석 도구 개발

- 프랑스·영국 소재 바이오테크 기업 Depixus® SAS는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SME Instrument 1·2 단계 지원을 받아 CoNAN I·II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세대 마이크로칩 기반 유전자 분석 도구 개발 목표 달성에 큰 진전을 이룸
- Depixus가 보유한 핵심 기술 MAGNATM는 DNA와 RNA의 염기 변형, 분자 구조, 상호작용 등 방대한 정보를 단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는 SIMDEQ(Single-Molecule Magnetic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에 접근 불가능했던 ‘동적 유전체 (dynamic genome)’ 영역 분석을 가능케 함
- CoNAN I (Complete Nucleic Acid ANalysis) 프로젝트에서는 CMOS 칩 설계·제작 없이도 새로운 마이크로칩 기반 분석 접근법을 검증할 수 있는 소형 시제품을 개발하여 초기 타당성을 입증함
- 후속 CoNAN II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토대로 개념검증을 강화하고, CMOS 칩에 수백만 개의 전자식 마이크로 웰 배열을 적용한 고처리량 시스템 MAGNATM Digital 개발에 착수
- 이를 통해 DNA·RNA 분자를 대규모 병렬 분석할 수 있어, 중개연구·임상진단·신약개발 등에서의 핵심 미충족 수요에 대응 가능
- Hamilton CEO는 “CoNAN 프로젝트는 Depixus가 창업 단계에서 독창적 접근법과 고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이번 성과와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최근 3,060만 유로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확보, MAGNA 기기 상용화 준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동 프로젝트는 혁신적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겨냥한 유럽 연구지원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과 유럽의 과학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복합적 난제를 다학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바이오테크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출처

https://eic.ec.europa.eu/success-stories/conan-projects-new-generation-microchip-based-to-ols-genetic-analysis_en